

서해안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남북 경협

정원준 / KOTRA 북한실 조사역

머리말

지난 6월 서해안에서의 무력 충돌 사태의 여파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이산 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차관급회담이 성과없이 연기됨으로써, 향후 남북 경협 및 남북 교역에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후 대북 정책의 최대 성과물로 평가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으로, 대북 포용 정책 전반에 걸쳐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내적 여론도 만만찮다. 그동안 남북간 경제 협력 관계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군사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새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북 포용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북한측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의향을 표시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신변 안전 보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남북 교역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해 교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일련의 사건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있어, 同 사건이 남북간 경협이나 교역에 직접적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외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난항을 보일 경우 올해 들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남북 경제 관계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미·북일 관계가 악화되면 이 또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남북 경협 및 남북 교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어 단기적 전망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개방 필요성 증대, 남북간 경

제적 상호 보완성 등 남북 경협 확대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고에서는 금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남북 경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해안 사건을 전후로 한 남북 경협 특징 및 업계의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및 남북 경협의 향후 전망을 제시해본다.

남북 교역 및 경협 현황

남북 교역

지난해 남북 교역 실적은 외환 금융 위기

및 이로 인한 환율 상승·내수 경기 위축 등 IMF체제의 여파로 전년도의 3억 800만 달러에 비해 28.0% 감소한 2억 2,200만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남북 위탁 가공 교역이 증가하고 대북 지원 및 협력 사업용 물자 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1999년 5월 현재 남북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3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던 1997년 동기 교역 실적(1억 2,192만 6,000 달러)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반입의 경우 농림 수산물·광산물·철강 금속 제품 등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증가하였으나, 섬유류는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의 경

〈표 1〉 연도별 남북 교역 현황

(단위: 美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8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5	186,592
1994	708	73	176,298	267	92	18,249	975	165	194,547
1995	976	105	222,855	1,668	174	64,436	2,644	279	287,291
1996	1,475	122	182,400	1,908	171	69,639	3,383	293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414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5	1,004	127	38,050	1,485	276	79,013	2,489	372	117,064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94호.

우 화학 공업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등이 주요 반출 품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품목에서 전년에 비해 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출의 경우는 대북 지원, 경수로 사업, KEDO 중유, 금강산 관광 사업, 협력 사업 등 비거래성 물품이 총반출의 54.8%를 차지함으로써 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9년 5월까지의 교역 실적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남북 교역 급감 현상이 경제 회복과 함께 극복되면서 정상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비거래성 교역 물량이 전체 교역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단지 교역 물량의 증가만을 남북 교역의 확대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 여파로 부진하였던 지난해에 비해 남북 교역이 점차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난 6월 서해 교전 사태, 금강산 관광 중단, 남북차관급회담 부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남북 교역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남북 교역의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실제 교역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에 따르면, 6.7월 중의 일련의

사건이 남북 교역에 직접적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 요소가 커져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 결국에는 교역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위탁 가공 교역

위탁 가공 교역은 1999년 5월 현재 2,789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8% 증가하였으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전년의 32.0%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가공 교역은 IMF 체제의 충격으로 교역량이 급감하였던 지난해에도 단순 교역보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위탁 가공 교역이 단순 교역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상황 변화·경제적 요인 등의 변화를 적게 받는 안정적 부문임을 보여주었다. 반입은 1,43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섬유 제품 69.5%, 전자 전기 제품 8.8%, 기계 및 운반용 기계류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출은 1,354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1%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섬유 제품

〈표 2〉 연도별 위탁 가공 현황

(단위: 美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금액	위탁 가공	금액	위탁 가공	금액	위탁 가공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5	38,050	14,344	79,013	13,544	117,063	27,888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95호.

66.8%, 전자 전기 제품 9.6%, 생활 용품 9.1%로 구성되어 있어 위탁 가공 교역이 주로 섬유·전자 등 경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탁 가공 교역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서해 교전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위탁 가공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탁 가공 교역은 단순 교역이나 대북 투자와는 달리 정치적·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교역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서해안 사건의 후유증으로 방북이 제한되는 등 당분간 원활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북 투자

대북 투자 등 남북간 경제 협력 사업은 단순 교역이나 위탁 가공 교역에 비해 양측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외적 파급 효과도 지대한 부문이다. 대북 투자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시너지(synergy) 효과를 살릴 수 있으며, 위탁 가공보다 진일보한 단계로 상당수의 국내 기업이 대북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남북 협력 사업은 1989년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공동 개발 사업을 협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92년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채택으로 대북 투

〈표 3〉 연도별 협력 사업(자) 승인 현황

구분	1992~96년(건수)						1997년 이후(건수)			
	1992	1993	1994	1995	1996	소계	1997	1998	1999	소계
협력 사업	0	0	0	1	0	1	5	9	0	14
협력 사업자	1	0	0	6	4	11	16	13	1	30

주: 한국통신, 한국전력, 외환은행 등의 경수로 건설 지원 사업 포함.

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북한의 핵 문제와 남로당 간첩 사건 등 경제외적 사건의 돌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 남북 경협 사업도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도출된 후 같은 해 11월 정부에서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1995년 (주)대우에 대한 대북 협력 사업과 고합물산(주)를 협력 사업자로 승인함으로써 남북 경협 사업은 본격적인 합작 투자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1997년에는 협력 사업 5 건, 협력 사업자 16 개 업체가 승인되었고, 1998년에는 협력 사업 9 건, 협력 사업자로 13 개 업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IMF 외환 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협력 사업 승인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4·30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로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줌

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경제 논리에 충실한 경협 추진이 가능하리라는 업계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규로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은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주)해주가 승인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이는 1997~98년 중 활발하게 대북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1997년 이후 대북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투자가 성사되어 생산에 들어간 것은 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가 유일해, 협력 사업자 승인 건수에 비해 실제 진행되는 대북 투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북 투자 부문은 단순 교역이나 위탁 가공에 비해 정치적 상황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서해안 사건으로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협 사업이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현대의 금강산 개발 사업

〈표 4〉 1998년도 이후 협력 사업(자) 승인 현황

구분	기업명	사업 내용	금액	승인일
협력사업자 승인	(주)에이스침대	침대 및 가구 제조 및 판매	425만 달러	1998. 1.9
	롯데제과	과자류 생산 및 판매	575만 달러	1998. 1.9
	(주)광인	옥외 광고	250만 달러	1998. 2.18
	안성개발	참기름 가공 공장 설립	50만 달러	1998. 3.13
	두레마을 영농조합법인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	800만 달러	1998. 4.8
	국제옥수수재단	신품종 슈퍼옥수수 개발	220만 달러	1998. 6.18
	(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산업, 현대아산 (1999. 2.25)	금강산 관광 사업	9,583만 달러	1998. 8.6
	(주)세원커뮤니케이션	13회 아시안게임 스폰서 대행	미정	1998. 8.6
	(주)코리아랜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60만 달러	1998. 8.28
	성화국제그룹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 및 평양성화 백화점 운영	190만 달러	1998. 9.14
	(주)아이엠티시스템	방송용 광고 제작	미정	1998. 10.17
	백산산업	버섯 생산 및 수출	81만 달러	1998. 10.28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 협력 사업	13만 달러 (1단계)	1998. 11.11
	(주)해주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299만 달러	1999. 1.8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94호

추진 이후 투자 규모가 커져 해당 기업들의 판단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외적인 변수가 반영된 남북 관계의 풍향에 따라 사업 진행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해안 사건 이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경협이 원활한 진행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삼성, LG, 대우 등 경협을 주도하는 추진 업체 들은 표면적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경제 협력 사업의 성격상 남북 관계의 냉각이 지속되

면 대북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해안 사건이 남북 경제 관계에 미친 영향

북한은 서해 교전 이후 조평통 대변인의 명의로 “남쪽 인사들의 평양 방문과 접촉을 당분간 제한 또는 중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성명은 외형상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번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저변에

갈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남쪽 인사들의 방문 제한 지역을 평양으로 국한한 것은 금강산 관광 사업과 진행되고 있는 기존 남북 경협 사업까지 전면 중단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도 북한의 조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북 경협 사업을 주도해온 현대, 삼성, 대우,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사업과 대표단 방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및 정경 분리 정책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데다 북한도 경제난 타개를 위해 남한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 현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북 투자 사업 역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합전자공단 조성 및 수산물 임가공 교역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삼성은, 대북 사업이 서해안 교전 사태와 금강산 관광 중단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연내 재방북하여 투자에 대한 구

체적 논의가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LG는 섬유 임가공 사업, 컬러 TV 임가공 생산 및 태영수산물과 공동으로 전개하는 나진·선봉 가리비 양식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LG는 컬러 TV 임가공과 관련하여 7월중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서해 교전 사태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대우도 국내 최초의 합영 회사인 남포 신발·셔츠·재킷 공장을 연말까지 증설하는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경제적·경제외적 과급 효과가 커 해당 기업의 독자 판단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제 협력 사업의 특성상,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고 남북 관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경우 이들 기업의 대북 경협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위탁 가공 교역과 단순 물자 교역 부문은 대북 투자에 비해 서해안 사건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 및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고 경제성 위주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은 이런 외부 충격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다.

서해안 사건이 분야별로 미친 영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북 투자를 포함한 남북 경협 사업·단순 교역·위탁 가공 교역의 순으로 교전 사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사태의 전개 방향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시장 선점 효과 및 상징성에 바탕을 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저렴한 인건비·관세 면제 등 원가 절감 차원의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둔 전략적 투자 행위가 중심이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점 타개를 위한 과제와 방안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는 지난해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경협 추진책의 일환으로 '4·30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경제 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경 연계 정책과 많은 규제·가이드라인의 존재가 남

북 경협 확대에 장애물이 되어왔음을 상기하면, '4·30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로 일단 제도적 여건을 정비한 셈이다. 그러나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번 서해안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남북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즉, 서해안 사건으로 현대와 북한 당국간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처럼 경제외적 변수가 경협에 장애 요인으로 돌출될 위험이 항상 잠재하므로 그만큼 경협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교역 인프라 확충

현재 대북 교역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애로 사항은 과도한 물류 비용, 대금 결제의 어려움, 간접 교역 방식에 따르는 비용 증가, 상거래 정보 입수 곤란, 거래선 확보 상의 어려움, 자금 부족 등이다. 즉, 교역 인프라가 취약하여 기존 교역 업체뿐

〈표 5〉 4·30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기대 효과
접촉·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 요건 구비시 원칙적으로 승인 - 대기업 총수·경제단체장 방북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 →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 적용 •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유효기간 연장(1년 → 3년) • 승인 처리기간 단축 - 접촉: 20일 → 15일, 방북: 30일 → 20일 	북한인 접촉과 방북 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용이·사업의 연속성 증대
남북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 승인 품목의 지속적 확대(205개 → 178개) • 생산 설비 반출 제한 폐지 - 유휴 설비의 무상 반출·임대 허용 - 1회 승인 한도(현행 100만 달러) 기준 폐지 	교역 대상 물품 확대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및 합작 투자 활성화
대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규모 제한 완전 폐지 • 투자 제한 업종의 Negative list화 - 전략 물자·방산 물자·기타 북한 전력 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사회간접자본·중공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 및 사업자동시승인제도 도입 - 300만 달러 이하 사업, 제3국내 북한인 고용사업, 당국간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사업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 투자 활성화

아니라 신규 업체가 대북 투자 및 교역에 참여할 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의 확충은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첫째, 과도한 물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정기 직항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현재는 부산~나진간, 인천~남포간 선박이 운행되고 있으나, 부정기선으로 운행되고 있고 그나마 화물 수송 비용이 높아 원가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

리고 북한 항구 컨테이너 하역 시설의 낙후로 화물 선적·하역에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어 항만 시설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간 육로수송체계 확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산업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금 결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물품 대금 결제시 중개상을 통한 간접 결제, 북한상

사의 제3국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 등가의 물품으로 결제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중개상을 통한 간접 결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상에 대한 커미션, 제3국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 합의시 청산 계정 도입, 남북 은행간 직결제 등으로 추가적 금융 비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 경협의 경우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물자 교역 및 임가공 교역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북 사업시 자금 부족이 문제가 되는데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해외시장개척기금 등 수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넷째,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거래선 확보 등 대북 사업 추진 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현재 대북 사업 추진시에는 거래선 확보, 상담 및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성실하고 신뢰성있는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거래선 물색·협상에 서부터 북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북 채널을 조정함으로써 대북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 및 바람직한 경협의 방향

단기적 조정 단계를 거칠 듯

이번 서해안 사건으로 남북 교역 및 남북 경협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서해안 사건이 교역이나 투자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전 직후 보여준 북한의 대응 태도 등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변 안전 보장 등에 대한 협상 여부에 따라 조만간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남북 경협이 조정 국면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 관광 중단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남북 경협이 위

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 경협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남북 경협 전반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역 확대의 당위성은 여전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물자 교역·위탁 가공 교역뿐 아니라 남북간 경제 협력 사업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로는 첫째, 북한의 남한과의 경협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생필품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90년대 이후 북한은 대외 무역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에너지·식량 구입을 위한 외화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올해도 대외 무역이 계속 부진에 빠져 있다. 따라서 북한 전체 교역에서 3위·전체 수출의 2위를 차지하여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남한과의 교역을 거부하기는 현실적

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하 핵시설 의혹, 대포동1호 시험 발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서해안 교전 사태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남북차관급회담도 성과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포용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한국이 지난해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경협 추진을 위한 여력이 생겼다는 점도 교역 확대의 플러스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반면, 남북한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폭 및 속도가 이에 종속되어 경협이 돌발적인 정치적 이슈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북한의 개방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가 없어 경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은 시장 경제 요소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체제의 불안 요소가 될 것임을 우려하여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도 남북 관계에 냉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시도할 경우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남북 경협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남북간 경제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안정으로 인한 국내 경기 회복, 정부의 정경 분리 정책의 일관성 유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경협의 필요성 등의 플러스 요인과 서해안 사건과 같은 경제외적 돌발 변수의 발생, 대북 투자를 위한 제도적 여건 미비, 북한의 태도 불변,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 조성 가능성 등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서해안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남북간 경협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많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바람직한 대북 사업 추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대북 사업 추진시 현 단계에서 사업 수행이 용이한 분

야부터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희 설비를 이용한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사업처럼 경제외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남북 상호간 보완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철저히 경제성·수익성 위주의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홍보나 과시를 위한 비경제적 동기의 근시안적인 투자는 경제외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은 시장 선점·상징성 중심의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보다 경제적 실리 위주의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진출할 경우 정보 공유 등 상호 보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과당 경쟁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統